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4월 23일(통권57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술과 한국의 대응

손 용 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목 차

1.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동북아 역내 안보구도의 변화
2. 북한이 핵전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3. 북한의 비핵화 전술: 제한적 + 거부적 CVID
4. 비핵화가 지체될 경우 한국의 대응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이번 주 금요일(4월 27일)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이나 6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협상에서 전례 없었던 남·북·미 최고 지도자의 탑다운(Top-down) 접근 방식이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 같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리더십과 비핵화 의지를 사전에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협상의 목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의 안전보장과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의 폐쇄·불능화·해체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철저한 사찰과 검증(CVID) 요구에 북한은 제한적 또는 거부적인 비핵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의 결과는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미국의 군사옵션으로 이어져 새로운 전운을 몰고 올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씨 왕조체제가 종식되어 개혁개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교체가 없거나 혹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달성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과 아울러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중지와 합의를 모아야 한다.

1.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동북아 역내 안보구도의 변화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동북아 역내 안보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핵무력 완성'과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遺訓)'이라는 자기모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요동치고 있다. 협상을 통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대체이익을 확보할 경우 북한의 핵포기가 가능하다는 '외교목적설'의 믿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역사는 미래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과 핵협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궤적을 보면 제3차 북핵 협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 강화로 귀결될 것 같다. 북한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으로 검증가능하며, 가역적인 비핵화' 입장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결렬은 북한의 추가 핵 도발과 미국의 군사옵션 충돌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는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전운(戰雲)을 몰고 올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단극질서에 도전하려는 강대국 중국의 세력전이 야망으로 동북아는 이미 신(新)냉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북한의 사실상의 핵무장 완성으로 북방대륙세력(북-중-러)은 모두 핵보유국인 반면 남방해양세력(한-미-일)은 미국만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어 양 세력 간 공격-방어균형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의 가치를 넘어 전략적 '핵 지대'로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역내 안보구도의 변화와 중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향후 비핵화 협상의 주요한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북한이 핵전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북한이 핵전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핵무장은 6.25전쟁 이후 불굴의 의지와 끈기를 바탕으로 전체주의체제와 수령독재정권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최고의 국가안보전략이자 제2의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군사적 능력(military capability)의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고립무원으로 인한 총체적인 국력과 국익의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핵무장을 결코 후퇴한 적이 없으며 북핵 협상 때에는 모든 기만과 책략을 구사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인 핵확산을 추진해왔다.

둘째, 탈냉전 이후에도 영속적인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자신의 안전보장은 스스로 지키는 것(自衛)이지 타국(미국)의 약속이나 자비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은 협상의 국면에서 미국에게 체제보장과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핵무장의 명분과 구실을 만들고 동시에 협상을 기만하기 위한 시간벌기 전술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지금까지 자력으로 핵보유국이 된 국가들 중에서 '강압'이나 '협상'에 의해서 핵포기를 선택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 핵포기 사례는 자체 핵무장 국가가 아니었으며, 리비아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경우이다. 자력으로 핵무기를 획득한 남아공의 경우는 자국의 안보위협이 사라지자 강병(強兵)보다는 부국(富國)을 위해서 외부의 개입이 아닌 자진해서 핵무기를 포기한 유일한 사례에 해당된다. 만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역사상 새로운 핵포기 사례를 만들 것이다.

넷째, 김씨 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몰락처럼 비핵화 이후 자유화와 민주화의 바람이 북한의 체제변혁을 일으켜 세습왕조체제의 몰락을 가져오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한 적이 없는 이유이자 리비아의 학습 효과로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야망은 더욱 더 커졌다.

3. 북한의 비핵화 전술: 제한적 + 거부적 CVID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전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 핵전략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구축에 성공한 파키스탄 모델을 획득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모든 핵시설이 농축우라늄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군사시설에 은닉된 농축우라늄 핵시설은 포기하지 않되 노후화된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은 상당부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미국의 비핵화 요구조건이 높아진 만큼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9.19공동성명의 후속조치인 10.3합의(2007) 사항이었던 영변의 상징적인 3가지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시설)과 2010년에 이미 공개한 농축우라늄시설을 해체 대상으로 제시함은 물론 2008년 냉각탑 폭파와 같은 전시효과도 재현할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 관문은 북한 전역에 은닉된 모든 핵무기와 농축우라늄 핵시설 등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이에 대한 리비아 모델을 전제한 미국의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보력에 노출된 핵 비축물을 추가적으로 양보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과 검증을 철저히 거부할 것이다. 주권

국가의 모든 군사시설을 샅샅이 사찰할 방안도 국제법적으로 마땅치 않은 것도 또 다른 난관이다. 바로 이 점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대 한계이자 김정은이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요구하면서 각 단계별 절차에서도 살라미 전술과 벼랑 끝 전술을 통한 값비싼 대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4. 비핵화가 지체될 경우 한국의 대응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가 지체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김씨 왕조체제가 종식되고 개혁개방과 근대화라는 '정상국가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경우이다. 이보다 더욱 확실한 방안은 자유민주주의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각오로 최후의 국방안보태세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중지와 합의를 모색해야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혹은 자체 핵무장이라는 고강도의 북핵에 대한 억지력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대처할 때만이 북한의 핵무장 적화흡수통일 야욕을 막을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항구적 승리도 지킬 수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